

2019 광주 세계수영 닷 올린다

예산 확보·대회준비 차질 우려에 사무총장 없이 조직위 먼저 출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 없이 우선 출범한다. <관련기사 3면>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무총장 승인이 늦어지고 주요 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광주시는 우선 조직위 법인 설립과 사무국 설립 등을 통해 대회 준비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법인 설립 허가 및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사무국을 발족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제부가 이날 사무총장 없이 우선 조직위 법인 설립, 사무국 신설 등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왔다”면서 “따라서 문제부와 향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해 조직위를 설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제부가 사무총장 승인을 미룬 채 광주시에 조직위를 우선 출범시키도록 한 것은 광주시에서 요구한 조영택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승인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사무총장 인선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직위부터

출범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조영택 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해 협의에 들어갔지만 문제부는 내정자에 대한 전문성 미흡 등 적정

성 여부를 내세워 한 달이 넘도록 승인을 하지 않아 내정자 임명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왔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의 2차 예산심의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한 내년

예산 19억원이 책정되지 않은 점도 조직위 우선 출범이라는 ‘미봉책’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무총장 없이 조직위가 출범할 경우 국제수영연맹(FINA)의 반발이 우려돼 광주시와 문제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FINA는 지난달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와 관련, 한국 정부에 예산 지원과 조직위 사무총장 임명 등 4가지 조건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대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문제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었다. 이 가운데 FINA는 실제 대회를 준비할 조직위가 사무총장도 없어 정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장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 미반영, 조직위 사무총장 미승인 등 대회 준비에 상당한 걸림돌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문제부가 우선 조직위를 출범하자고 협의를 해온 것은 좋은 신호로 해석된다”면서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위 출범 등을 차근 차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업체 평가위 ‘관 주도’

전남개발공사·도 과반 넘어 업체 사전 로비도 가능하게

전남개발공사가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사설계 업체 평가위원을 ‘관 주도’로 구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평가 3일 전에 위원 명단을 공개해 업체들의 사전 로비를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 평가위원 9명(위원장 포함)을 26일 공개했다. 평가위원은 전남개발공사 4명, 전남도 1명, 광주전남연구원 1명, 지역대학 교수 3명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와 전남도 관계자가 평가위원의 과반을 점한 것이다.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모두 2866억원(추정치)을 투입해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100만㎡(33만평)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사설계 용역비는 모두 40억원으로, 건설 불경기 속에 지역 및 수도권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시행사가 평가를 주도하게 되면 공정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명단의 사전공개도 그릇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업체 선정은 위원들의 평가 점수 70%, 가격 점수 30%의 비중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남개발공사 측은 규정상 내부평가위원을 전체의 70% 이내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비중을 줄였으며, 외부평가위원은 3배수 추천으로 선정하는 등 최대한 공정성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할 수 없고 회의 진행만 맡게 돼 공사 평가위원은 3명”이라며 “명단을 공개한 것은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자들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 로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감점 등 패널티를 줄 예정이며, 명단 공개가 오히려 투명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 수박 ▶3면

제2 남도학숙 서울 녹번동에 착공 ▶5면



파독 간호사 - 광주 강경선씨 ▶18면

또 ... 승부조작 국가대표 연루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다빈치 작품 감상하며 시원한 피서
화화와 발명품 등 작품 81점이 선보인다.

27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개막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 타임머신’ 특별전을 관람객들이 감상하고 있다. 특별전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열리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현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오늘 선고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 적용대상 포함 여부 쟁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관해 28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현재의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는 사회 주요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9월 28일 시행된다.

지난해 3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총 4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는 이들 4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심리해왔으며 작년 12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이밖에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처벌 등도 쟁점이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 현재가 위헌(헌정위헌 등 변형결정 포함)이나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세상의 모든 빛을 압도하는
눈부신 자신감

헤라 UV 미스트 쿠션

언제 어디서나 찬란한 빛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울트라 미립 분산 기술이
한 번의 터치로 피부를 밀착시켜
들뜸없이 완벽하게, 더 촉촉하고 섬세하게-
건강한 윤기분류 피부를 선사합니다

HERA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료유류무) www.hera.co.kr